

전북경찰, 불법선거 차단 '온힘'

선거법 위반 29명 조사... 금품수수·후보자 비방 등 집중 단속

제20대 4·13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며 불법선거 차단을 위한 경찰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4·13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9명(19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29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혐의가 없어 수사 종결했다.

또한 24명(1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3 선거를 앞두고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후보자 비방 등 불법 선거수법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 청장은 "총선을 앞두고 돈 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은 중립적 입장에서 불법 선거수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각종 불법 행위를 차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담당관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돈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적절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품살포와 항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살포는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후보자나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거 행위도 범행횟수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선거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 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양당 구도에 국민의당이 세를 더해 3자구도로 재편되면서 선

거일이 가까울수록 과열 혼탁 선거전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주시와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선거구가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 이들 3개 선거구에 대해 돈 선거와 비방·흑색선거 행위·불법선거 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과열·혼탁지역은 선관위가 선거구 개편과 후보자 난립 등 후보자간 우열을 가능하게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중대선거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해 불법 선거범죄를 집중 감시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매일 2~3개 선거구를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 지난달에는 전주시 병과 익산은 남원·순창 선거구를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왔다. /박용주 기자



7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와 키리졸브 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키리졸브 훈련 중단하라”

도내 진보 시민단체 촉구

전북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북한 핵 위협 방어를 위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등 도

내 30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동북아 무력 대결을 격화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맞

서 북한도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키리졸브 훈련 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 핵에 대비한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중일 삼국의 군비 경쟁을 불러와 오히려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보건소, 만성질환 건강교실 운영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전주시가 시민들의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보건소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만성질환 상설 2일 교실은 뇌졸중과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을 주제로 만성질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7~8월을 제외하고 연간 한 달에 두 번씩 운영된다. 2일 교실에는 참여자들의 협압과 혈당 콜레스

테롤 및 체성분 등을 측정하고, 각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운동실습, 영양관리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고고당' 운동교실은 총 4기로 1기 수 당 매주 3회 운영된다. 보건소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질환자와 대상후속군을 진단받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만성질환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올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인 9월 첫째 주에 뇌졸중 2일 교실도 운영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성질환 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기회 제공

21일까지 신청 접수

전주시가 오랜 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고국 나들이 기회를 제공한다.

전주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최근 2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관내 거주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 여성청소년과와 전주시문화가족지

원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7가정(4인 가족 기준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자녀, 시부모)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전주시에서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을 방문 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으로, 선정된 가정에는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가 지원된다. 여행 시기는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며, 모국에서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김영재 기자

“학생 개인정보 수집 금지”

도교육청, 인권침해 우려 도내 각 학교 공문 보내

전북도교육청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입학 전 병력과 가정형편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매년 2월에 이 같은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재차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달 16일 도내 43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학교의 62.8%(27개교)가 입학 전 교육 경력을 묻는 항목이 있었으며 44.2%(19개교)는 신체장애 등 병력을 물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밝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체제를 보면 ▲입학 전에 심하게 앓은 병명이나 신체장애 정도를 기입하는 등 입학 전 병력 묻기 ▲보호자의 학력과 직업, 종교 기입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또 가정형편을 조사하면서 편부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여부를 기입하게 하거나 문자 셈하기 등 입학 전 학습 정도를 묻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내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행정편의주의 조사가 아닌 진화적 상담 등을 통해 교육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자료라 해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형편 조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학부모 개인정보 등에 개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